#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55% "경영 어렵다"

## 납품량 감소·내수 침체·원자재가격 상승 등

## 매출액 20% 감소·외상대금 지급 연체 46%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8곳은 지역 경기상황을 '위기'로 인식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대기업협력업체 경영애로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92개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현재 경영상태에 대해 55.4%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4·4분기보다 다소 호전됐지만 협력업체의 경영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괜찮다'고 답한 업체는 8.7%에 불과했다.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대기업 납품물량감소(58.8%), 내수경기 침체(41.2%), 원자재가격 상승(19.6%) 등의 순으로 답이 이어졌다. 또 어렵다고 응답한 협력업체의 경영상태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46.7%, 외상구입 대금지급이 30일 이상 지연된 업체가 46.4%에 이르렀다.

대기업 협력업체가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응방안은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67.4%), 거래처 다변화(54.3%),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감축(12.0%), 업종추가 또는 전환요구(12.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 협력업체가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꼽은 정책과제로(복수응답)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이 62.0%로 가장 많았고, 지역 내 대기업 유치 및 지원 확대(44.6%), 자동차·가전중심의 지역산업 다변화(31.5%),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확대전개(13.0%) 등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협력업체의 82.6%는 지역 경기상황을 '위기국면'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내수경기 침체(80.3%),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21.1%), 수출감소(17.1%), 환율(10.5%) 등의 순으로 꼽았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및 엔저 영향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우리 지역 대기업 협력사들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 여건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전남농협 서울 '팔도직거래장터'

전남지역 우수 농특산물이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전남농협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서울 여의도광장 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전국 '팔도직거래장터'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아 우수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전남농협은 오이, 파프리카, 참외, 멜론, 딸기 등 100여종의 전남지역 우수농특산물과 지역한우를 이동축산물 판매차량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개장 첫날인 14일부터 전남농특산물에 대한 수도권 소비자들의 관심이 쇄도해 25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애호박 데이로 지정한 15일에는 광양지역 애호박 2000여개를 특별 할인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통해 3000여만원 매출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

#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올 하반기부터 전국 시행

## 광주·전남서도 후속조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협의와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유통법의 개정 예고에 따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조례를 만들었거나 준비 중에 있어 특별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무휴일(평일과 휴일)을 놓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통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하달했다.

개정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자정부터~오전 10시까지 장사하지 못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무 휴업은 공휴일에 실시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이 아닌 날 점포 문을 닫아도 된다.

광주시 구청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업계와 관공서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마찰을 빚을 사안은 아니다"며 "다만 의무 휴업 공휴일 실시와 관련 대형마트에선 평일을 포함했으면 하는 의향이어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통법 개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2차 위반 땐 7000만원, 3차 땐 1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함께 올해 7월24일부터 유통법이 규정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신청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와 신규출점과 영업시간 등을 놓고 소송중이고 지역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장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조례 개정과 협의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가계 빚 1100조…1년새 52조 ↑

## 당국 부채 건전성 조사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한국 국민의 진짜 가계 빚이 1천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주택'을 의미하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80% 이상 대출도 3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 당국의 전방위 대책에도 가계 부채 관리에 '빨간등'이 켜진 셈이다. 이에 관련 당국이 가계부채 건전성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돌입했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질 가계 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전년의 1046조4000억원보다 52조1000억원이 급증했다.

실질 가계부채란 한국은행이 추출해낸 가계부채인 가계신용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사업자나 종교단체 등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을 합산한 수치다. 가계 신용은 대출이나 외상 구매를 합한 것이다. 지난해 실질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이 959조4000억원,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이 139조1000억원이었다. 2011년의 911조9000억원과 134조5000억원에 비해 모두 늘었다.

2000년대 초반 600조원 수준이던 실질 가계부채가 10여 년 만에 갑절이 된 셈이다. 가계 부채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주택 경기 부진에 소득 증가세마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8%로 지난해 말보다 0.09% 포인트 높아졌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0.07% 포인트 올라갔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72%로 지난해 말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4·1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하우스푸어도 가계대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다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한다. 지난해 개인 실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6%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 중소 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을 골목상권·전통시장 특례보증 75억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동성자금 지원 75억원 등 총 15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협약 주 내용은 보증포함 5000만원까지 보증비율 100%의 전액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자는 최고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광주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0.5%까지 특별 우대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의 보증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1년간 연 2.50%의 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최재호기자 lion@

# 농어촌公, 광주·전남 172개 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지역 17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2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수토방수로, 배수장 등 홍수배제시설 공정관리 및 우기전 가동여부 점검과 관련 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여부 점검, 안전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이나 보완이 필요한 곳은 우기전에 보수보강을 완료해 장마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나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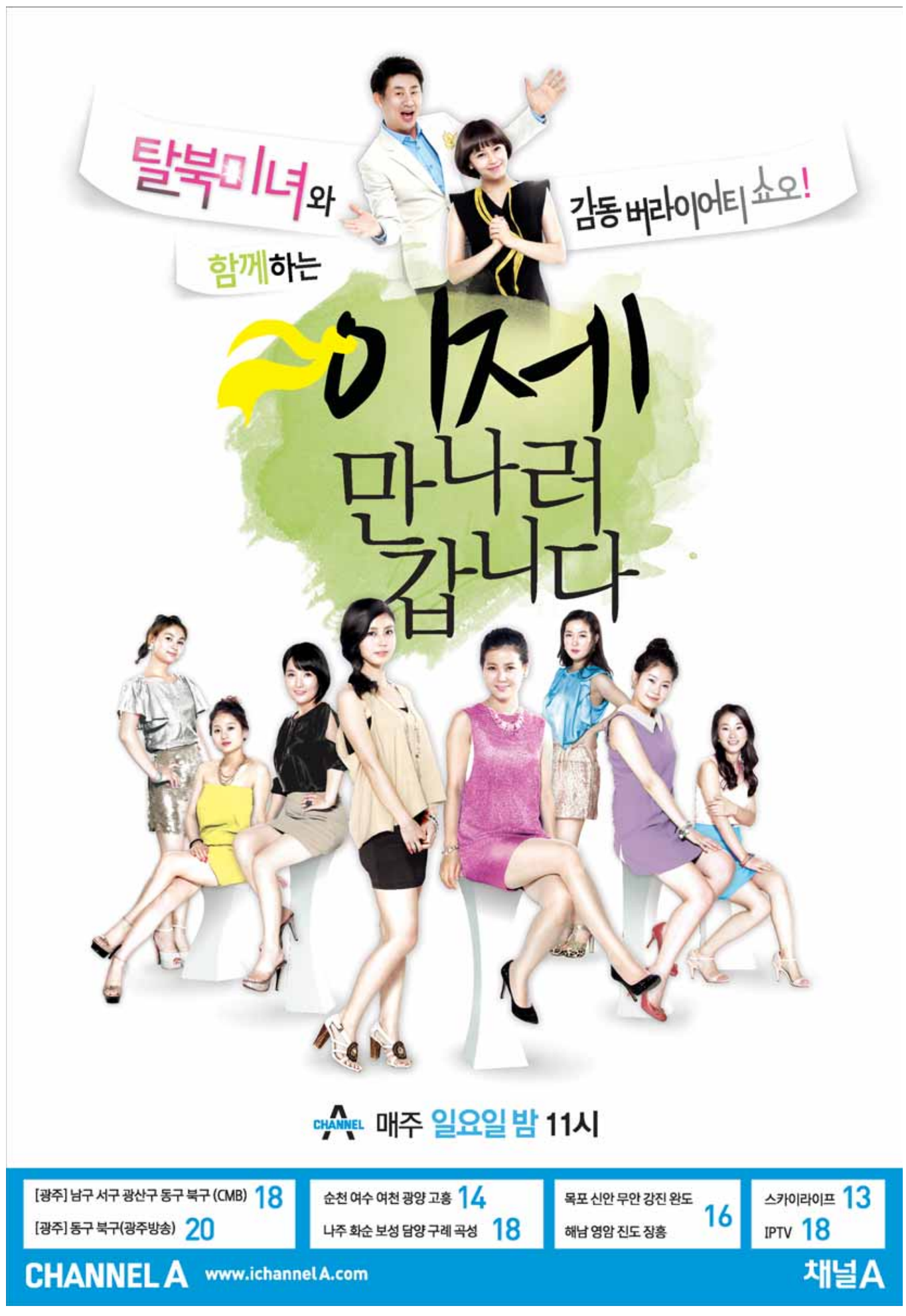
김행윤 전남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실업률 소폭 상승

4월 광주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전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 '2013년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4월 취업자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8%(1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56.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올랐다.

4월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2.0%(5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4%로 0.5%p 상승했다.

전남지역 4월 취업자는 92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1만3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62.5%로 0.6% 하락했다. /김대성기자 bigkim@